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 다 나 은 정 부</b>
	<b>배포일시</b>	2019. 9. 24(화) 총 9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도시경제과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지봉현, 주무관 김대진 • ☎ (044) 201-3737, 4725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9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24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...도시 안전망 강화

###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 통합플랫폼 연계 오는 10월부터 5개 지자체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기로

현 행		개 선
◇ 주요 간선도로 CCTV(1.2만대) 활용으로 도심 사각지대 발생 ◇ 지역 단위 검색으로 타 관내로 진입 시 수배차량 추적에 한계	→	◇ 지자체의 <b>방법용 CCTV(51만대)</b> 추가활용으로 촘촘한 검색망 구축 ◇ <b>전국 단위 검색</b> 으로 수배차량 실시간 적발 및 연속 추적 가능

-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,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 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CCTV(폐쇄회로TV)가 폭넓게 활용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 등과 함께 9월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'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(MOU)'을 체결했다.
-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\*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\*\*(이하 "WASS")을 연계하여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·검색하여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.

- \*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 : 방법·방재, 교통,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관리하는 플랫폼
- \*\* 수배차량 검색시스템(WASS) : 간선도로의 CCTV 약 1만 2천여 대를 연계, 일 200여대에 달하는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·판독하는 시스템

□ 그동안에도 살인·납치·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,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하여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.

○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**방법용 CCTV\*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**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, 골목길,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**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**

\* 방법용 CCTV에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설치하면 수배차량 검색용으로 **활용** 가능

○ 아울러,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**현장 사진, 범인 도주경로,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**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 또한 적극 지원한다.

□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**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**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.

○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\*하는 **살인, 강도,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**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**회신**한다.

\*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)

○ 또한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**접속**토록 하며,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**망**을 분리하여 구축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, 은평구,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\* WASS 연계 지자체(누적) : ('19) 5개 → ('20) 79개 → ('21) 108개 → ('22~) 229개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'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자체와 112·119·재난, 사회적 약자(어린이, 치매인 등) 보호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'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'을 추진해 왔다.

\* 대전시 사업효과('18년 기준) : 범죄율 감소(6.2%↓), 7분내 소방출동(63% → 79%) 등

○ 올해 추경예산에 12개 지자체가 추가 반영되어 올해까지 49개 지자체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, '21년까지 108개 지자체,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“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.”면서,

○ “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,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적대표자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지봉현 사무관(☎ 044-201-37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-

## 참고 1

## 긴급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

### □ 서비스 개요

-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센터와 WASS\*를 연계하여 CCTV로 수배차량을 실시간 검색·적발하여 검거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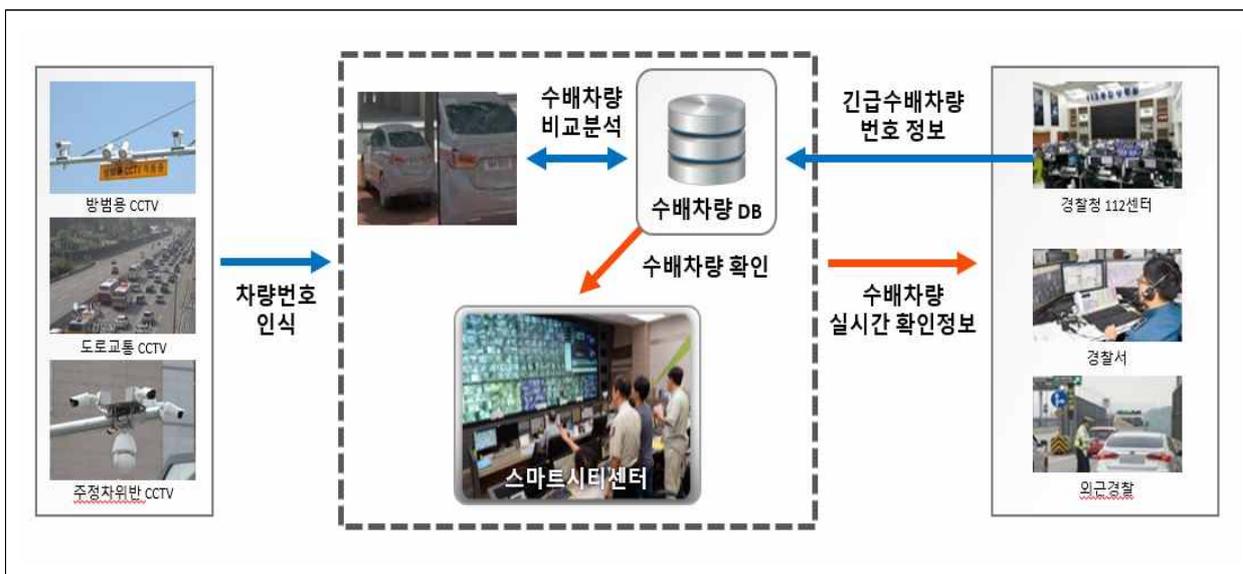
\* WASS(수배차량검색시스템,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)

### □ 기대효과

현 행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주요 간선도로 CCTV(1.2만대) 활용으로 도심 사각지대 발생</li> <li>◇ 지역 단위 검색으로 타 관내로 진입 시 수배차량 추적에 한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지자체의 방법용 CCTV(51만대) 추가활용으로 촘촘한 검색망 구축</li> <li>◇ 전국 단위 검색으로 수배차량 실시간 적발 및 연속 추적 가능</li> </ul>

### □ 서비스 시나리오

- ① 경찰청은 긴급 수배차량 정보(DB)를 스마트시티센터로 전송
- ② 스마트시티센터는 CCTV를 통해 수배 차량 발견 시 수배차량 통과 시간·위치,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등을 112 상황실에 실시간 전달
- ③ 112상황실은 수배차량 추적 및 인근 순찰차 등에 상황 전파
- ④ 112 순찰차가 긴급 출동하여 도주로 차단 및 검거



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

## 업무 협력 합의서

- 국토교통부 · 경찰청 · 서울특별시 · 광주광역시 · 강원도 · 은평구 · 서초구 -

국토교통부, 경찰청,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, 은평구, 서초구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통합플랫폼과 경찰청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, 다음 합의를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합의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연계와 상호 협력체계 마련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차량이용범죄 신속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배차량 정보 공유 및 지자체 CCTV 영상정보의 실시간 제공
2. 지자체 CCTV를 통해 수집된 차량정보 중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목적으로 수배차량의 통과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
3.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지자체 CCTV와 경찰청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 간 연계 지원
4. 긴급 상황 시 현장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 지원

**제3조(시범사업)** ① 양 부처는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, 은평구, 서초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.

② 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.

1.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간의 연계기술 개발(R&D) 및 구축, 타 지자체 확산을 지원한다.
2. 경찰청은 소관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수배차량 정보,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.
3. 서울특별시·광주광역시·강원도·은평구·서초구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연계 망 구축 및 경찰청이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수배차량, 통과차량 정보를 제공한다.

③ 기타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)** 각 기관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.

**제5조(효력 및 유효기간)** 본 협약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2019년 9월 25일

국토교통부  
장관 김현미

경찰청  
청장 민갑룡

서울특별시  
시장 박원순

광주광역시  
시장 이용섭

강원도  
지사 최문순

은평구  
구청장 김미경

서초구  
구청장 조은희

□ **사업개요**

- 세월호 사고('14.4) 이후 지자체와 112·119·재난,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 재난안전 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\*으로 연계하여 재난구호·범죄예방 등 국민안전서비스 업그레이드 추진

\*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각종 정보시스템 연계 및 도시상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 S/W로 정부 R&D('09-'13, 100억원)로 개발

□ **관계기관 업무협약(MOU)**

- (국토부-경찰청, '15.7) 납치·강도·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현장영상, 범인 도주경로 등을 제공
- (국토부-안전처, '15.9) 화재·구조·구급 상황 시,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,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
- (국토부-민간통신사, '16.7) 아동·치매환자·독거인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, 스마트시티센터가 통신사에서 사진,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소재 및 현장상황 파악 후 경찰서·소방서 신고 등 조치
- (국토부-과기부-서울시, '17.11) 서울시(25구청 포함)와 112·119, 재난망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
- (국토부-에스원-ADT캡스-KT텔레캅-NSOK, '18.3) 민간보안과 공공 안전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, 화재 등 협력
- (국토부-법무부, '19.1) 스마트시티센터-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 범죄로부터 미성년자, 여성 보호

□ **구축 및 구축 진행 지자체 : 22개 지자체('18.12 현재)**

구 분	'18까지	'19	'20	'21	'22	'23
계 획	22개	27개	30개	29개	20만명 이하 검토중	

\* 대상 : '21년까지 혁신·기업도시, 주민 20만명 이상 108개 지자체

## 참고 4

###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효과('18.8, 대전시 운영 사례)

※ 대전시는 스마트시티 R&D 실증도시로 선정('16.4)되어 지자체와 112, 119,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한 5대 연계서비스 기반구축 및 시스템 운영 중

#### □ (CCTV영상 제공) 각 상황별 15,117건 제공('17년도)

구 분	제공 건수	제공 내용
112 긴급영상/출동 지원	8,779건	- 절도, 행패소란, 보호조치 요청 - 실종신고, 교통사고 처리
119 긴급출동 지원	5,758건	- 화재, 구조, 구급 출동 지원
긴급 재난상황 지원	438건	- 재난, 재해, 사고 상황 지원
사회적 약자 보호	142건	- 치매, 어린이, 실종자 보호 등

#### □ (112 연계 효과) 범죄율 감소(△6.2%) 및 검거율 증가(2.7%)

구 분	15년	16년	17년	증감(율)	비고
발생(건)	18,990	16,835	15,785	△1,050	전년 대비
발생(율)	-	88.6	93.7	△6.2	
검거(건)	12,985	13,000	12,621	△379	
검거(율)	68.3	77.2	79.9	2.7	

\* 5대범죄(살인, 강도, 성폭력, 절도, 폭력)만 집계('18.8 대전지방경찰청)

#### □ (119 연계 효과) 평균 출동시간 1분28초 단축(7:26초→5:58초), 7분내 도착율 15.4% 상승(63.1→78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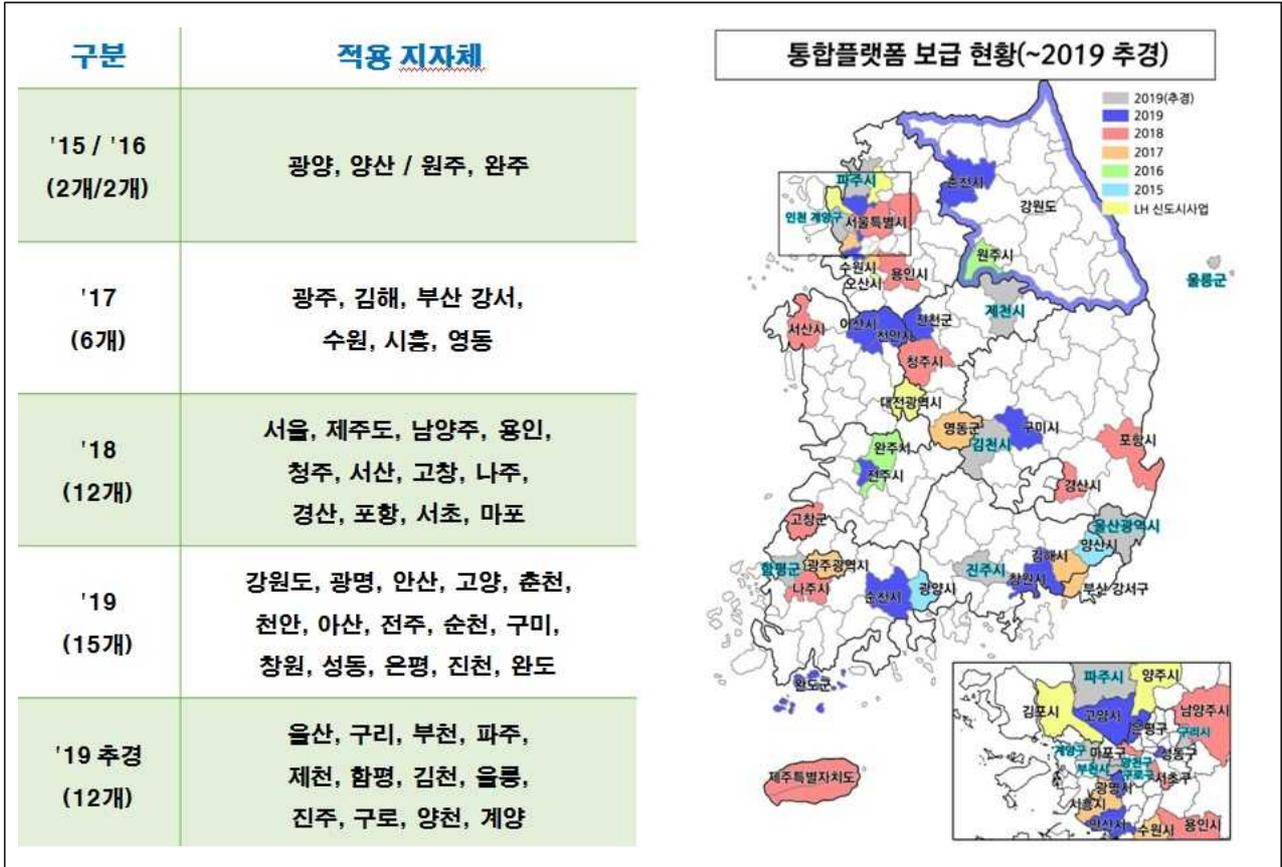
구 분	2016	2017	'18.6	비고
출동 건수	974	1,059	639	
평균 출동시간	7:26초	6:30초	5:58초	
7분내 도착율	63.1%	72.8%	78.5%	

\* 119 긴급출동은 화재, 구조, 구급이나 화재만 집계('18.8 대전소방본부)

## 참고 5

#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지자체 현황

### □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



### □ 센터 구축현황(CCTV센터 포함)

(단위 : 시군구 개수)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
구축	26	34	27	33	29	22	19	18	16	5
누계	26	60	87	120	149	171	190	208	224	229

### □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
CCTV 설치(대)	309,302	364,302	461,746	565,723	655,030	739,232	845,136	954,261	1,032,879
전년대비 증감(대)	-	55,075	97,444	103,977	89,307	84,202	105,904	109,125	78,618

\*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(2019.6.11)